

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유족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6.24.(수) 경향신문 - “비공개” “조사 중” “기다리라”...산재 유가족 괴롭히는 ‘불통’

-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. 노동·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되는 터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.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,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 경위·진행 상황 등을 설명토록 안내
- 아울러,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 등에도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유족이 참여토록 하는 등 조사 과정을 공개한 바 있음
 - * '26.3.20.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, '26.6.1.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등
 - 올해 6월 1일부터는 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
- 다만, 사고 발생 초기에는 구체적 사고 경위나 원인이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,

○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 정보 노출 시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족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

□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알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유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음

○ 현장 감식 등 재해조사 과정에 대한 참여, 재해 원인·경위에 대한 유족의 설명 요청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임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 (044-202-8952)

